

2008年度 仁川發展研究院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1. 처분요구서 일람표 (10건)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연구결과물 성과발표 및 공개 ⇒포럼 구성·운영 및 홈페이지 개편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권고)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양정기준 마련·시행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맞는 연구 과제 선정 및 적정 수탁과제 기준 마련 ⇒객관적 평가를 위한 원외 전문가 확충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권고)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회제규정 및 보수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계약의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1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빙연구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초빙연구원 운영 관련 인사규정 마련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2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급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성과급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보직자 성과급 수당 일률적 지급 금지 ⇒성과급 수당 지급체계 개선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2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수(위)탁연구용역 관련 심의기능 강화 ⇒연구의 책임한계 규정 ⇒위탁용역 심의시 객관적 선발방법 마련 	인천발전연구원	개선		2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 	인천발전연구원	주의		2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세(종업원할) 업무처리 부적정 ⇒초빙연구원도 포함하여 사업소세 납부 	인천발전연구원	주의		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액 업무처리 부적정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매월 신고·납부 	인천발전연구원	주의		33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유형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합 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체 연구	정책 연구	수탁 연구	자체 연구	정책 연구	수탁 연구	자체 연구	정책 연구	수탁 연구	자체 연구	정책 연구	수탁 연구
83	91	58	24	26	17	30	37	25	29	28	16

[위법부당내용]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①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②지방행정제도개선, 지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③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④지역의 각종 경제와 사회지표의 수립 ⑤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⑥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절차 부적정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존립의 목적과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정기적인 자기진단과 주위환경의 변화에 맞춘 환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시민의 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시의 행정계획(2020 미래발전전략·2025 도시기본계획 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1999년에 수립된 “인천발전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2015”를 수립한 바 있으나,

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의 행정계획인 미래발전계획(2020) 및 2020 도시기본계획 등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연구결과 공개 등 부적정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06년도에 자체연구과제 24건, 정책연구과제 26건을 수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자체연구과제 30건, 정책연구과제 37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면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하여 평가받음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기관임을 확인하고 기관의 위상을 정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연구결과 성과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공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자체연구 성과물만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인천을 대표하는 포럼 부재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구도심재생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메가 이벤트(도시축전·아시안게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요 시책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시의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및 사회 지표 개발과 자체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자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하여는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경기·강원·대구경북·제주 등 여타 광역시·도 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포럼을 통해 정기·수시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다양한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천을 대표하는 체계화된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사회와 소통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4.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각 시·도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SDI정책리포트·서울도시연구·세계도시현황·서울경제·SDI

웹진·정책리포트동영상’ 등의 우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 개발연구원에서는 ‘선진화위원회·정책포럼’등 전문가 네트워크와 ‘CEO리포트·정책브리핑·연구성과브리핑(VOD)’등 우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대경콜로키움·대경포럼’ 등 전문가 네트워크와 ‘대구경북 경제동향분석·해외출장리포트·동영상자료’ 등의 우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는 타 시·도 연구원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재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나 예산 등의 사정을 들어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에 있어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시의 행정계획(2020미래발전전략·2025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2. 연구결과물에 대하여는 성과발표회 등을 통하여 시민과 공유하고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3. 정기 또는 수시로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포럼을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4. 시민사회에 인천발전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구원 징계에 관한 사항

○ 2006년도 ○○○ 연구원 자체연구사업

- 과 제 명 : 인천지역 장소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 소요예산
 - 예산액 : 16,030천원
 - 집행액 : 15,681천원
- 연구심의회 심의 현황

중간심의 (2006.7.11)			최종심의 (2006.12.7)			재심의 (2007.2.27)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의견	심의위원	심의결과	조치의견	심의위원	심의의견
내부 3명 외부 3명	의견제시 13건	불요 1건 수용 8건 부분수용 3건 수용불가 1건	내부 3명 외부 4명	수정후 재심 (의견제시 29건)	부분수용 18건 수용불가 2건 수용 9건	내부 5명	발간불가

○ 인사(징계)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5. 17.(목) 11:00
- 징계대상 : ○○○ 연구원, ○○○ 연구원
- 징계사유 : 2006년 연구과제 결과 부실
- 결 과 : ○○○ 연구원 “견책”, ○○○ 연구원 “경고”
- ※ 운영위원회 위원 : 내부위원 6명

○ 신성희 연구원 재심청구에 의한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6. 22.(금) 09:30
- 결 과 : 공개주의 촉구

[위법부당내용]

○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수행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 연구직 직원이 1년의 과제수행기간 동안 1인이 1개의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연구내용 등을 토의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규정 제33조에 의거 연구심의회(이하, “연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연심회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착수·중간·최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4명의 연구원이 24건의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이중 ○○○ 연구원이 수행한 ‘중국환발해 대도시권의 형성 및 경쟁력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최종 연심회에서는 13건의 심의의견을 달아 수정후 재심을 의결한 뒤, 이후 재심의에서는 발간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고, ○○○ 연구원이 수행한 ‘인천지역 장소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대하여는 중간 연심회에서 13건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최종 연심회에서는 29건의 의견을 달아 수정후 재심을 의결하였으며, 재심의에서는 발간불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 결과 부실을 사유로 ○○○ 연구원과 ○○○ 연구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53조(징계사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07년 5월 17일 「인천발전연구원 정관」 제35조의3제2호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결론을 한 결과, ○○○ 연구원에 대하여는 “견책”을, ○○○ 연구원에 대하여는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 연구원은 “견책” 의결에 불복하여 인사관리규정 제57조 규정에 의거 재심을 청구하였고, 연구원에서는 2007년 6월 22일 같은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주의 촉구”를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징계는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구성원으로

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써 징계권의 행사와 징계의 양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엄정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징계의 양정은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양정결과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징계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내부 구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없이 징계를 양정하였고,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도 당초와 같은 위원회에서 객관적 감경사유도 없이 감경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재심의를 당초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건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함이 타당하나,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과 관련 규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초기 시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 조치하오니, 향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등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기성 시가지의 잠재력을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며,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마련 및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진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한 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을 재조명하고, 개성공단 확장 및 해주경제특구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3각 경제벨트에서 인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를 발굴하는 등 동북아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9년 세계 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양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원 38명을 비롯한 관리직 14명 등 총 61명의

인직원들이 2008년 10월말 현재 자체연구과제 30건, 정책연구과제 28건, 기획연구과제 10건, 수탁연구과제 27건 등을 발굴, 연구하는 등 명실 공히 인천시정 발전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6.15점으로(경영분야 50점 만점에 42.505점, 연구분야 50점 만점에 43.645점) 타 시·도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위 평가결과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위탁평가 실시 후 행정부시장 주재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평가등급을 9등급으로 배분하여 등급별로 12.5점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86.15점은 A0에 해당하는 점수임. 단, 평가기관이 시·도별로 다르므로 타 연구원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 확보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비롯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중간·최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연구원 개인별 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및 연봉 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에는“연구과제 평가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및 성과관리 분야 등 제반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확인되었기 이를 개선 요구코자 합니다.

1.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시정여건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선정체계가 비교적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당해연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와 부합되는 과제선정이 미흡하고,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과제 수요조사 체계가 미흡함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07년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1. 미래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형 도시발전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글로벌 도시로서 인천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3.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문연구 수요에 대응”, “4. 지속가능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시도”로 정하였고,

또한 2008년에는 연구사업 추진방향을 “시정 핵심사업 관련 정책 연구 강화”로 정하는 한편 연구사업 정책방향을 “1. 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에 따른 전략구상”, “2.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3. 인천시 메가 이벤트 사업 추진의 정책적 지원”, “4. 남북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대응방안 모색”으로 정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는바,

2007년 및 2008년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인천시 글로벌 행정 강화 방안(이용식 선임)”, “인천시 U-CITY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정지원 연구위원)”, “인천시 메가 이벤트 자원봉사 활용방안(권현진 책임연구원)”,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김용하 선임연구위원)”, “한중일 FTA 체결에 대비한 인천업체의 인식과 대응과제(강승호 연구위원)” 등 일부 연구원(위원)들은 당해연도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목표에 부합되는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과제는 이와 연관이 없는 과제라 판단되는바, 향후 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함에 있어 시정여건과 시정목표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확충·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물론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교통·주택·건축 및 환경 등의 특정 분야는 인문·사회분야와는 달리 당해연도 연구과제 추진방향이나 목표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향후 각각의 연구 분야별로 이러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또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정책기획관실의 경영평가 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과제 수요조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바, 연구원에서는 2007년 12월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이 요구됩니다.

2.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일부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과다 수탁으로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개선이 요구됨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사업 수행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자체연구는 전 연구직 직원이 1년의 과제수행기간 동안 1인이 1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수탁연구나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07년 시의회 162회 임시회 개최시에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개인별로 연간 5건에서 14건까지 연구실적에 편차가 심하고 연구과제가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연구의 밀도나 내용의 깊이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원들에게 적정량의 과제를 배정하여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요구를 하였고,

이에 연구원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6년 과제수행체계 개편”을 통하여 개인별 연구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자별로 연구책임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 1건을 100%로 설정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연구과제가 3건 (3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자별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의 총량이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인별 연구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별 연구업무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 책임연구원(인사행정·조직분야)의 경우 2007년 자체연구 과제 1건, 정책연구과제 2건, 수탁연구과제 3건 등 1년간 총 6건 (600%)으로 개인당 적정 연구량 기준인 300%를 2배 이상 초과하였고,

2008년에도 ○○○ 연구위원(관광계획·개발정책 분야)의 경우 자체연구 1건, 정책연구 3건, 수탁연구 1건 등 총 5건(500%), ○○○ 연구위원(산업정책·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자체연구 1건, 정책연구 2건, 수탁연구 3건으로 총 4건(400%), ○○○ 연구위원(도시재생 분야)의 경우 자체연구 1건, 정책연구 1건, 수탁연구 2건으로 총 4건(400%)으로 역시 동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연구과제를 심의·평가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외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자체연구 과제에 대한 심의는 원내 전문가 3인, 원외 전문가 3인 및 자문위원 중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어 자체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원내 전문가 4인과 의뢰부서 공무원 1인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원외 전문가를 추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연구원에서는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도출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의 심의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과제 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이 자체연구와 동일하고, 또한 내부 전문가라 할지라도 타 분야 전문가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2007년도 자체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내부 전문가(연구위원) 상호간에 경쟁의식 등으로 객관성을 잃은 평가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는바, 자체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 실질적으로 2007년 각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A 실장에 대하여 평가위원 7인중 6인은 1등급 또는 2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내부 전문가 자격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B 실장은 A 실장에 대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함

*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2007년에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에는 “평가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7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지속적으로 검토, 마련 중에 있음

아울러 연구원에서는 현재 연구자별 적정 수행건수를 획일적으로 적용, 규제하고 있으나(양평가시 과제 동시수행 1인당 300%, 누적총량 250% 초과 제한), 향후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적정한 과제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경영평가 결과에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임),

수탁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하여 과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수탁과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또한 연구원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유지, 수익사업 창출 및 연구원 위상정립을 위하여 자체연구와 수탁연구 사업비용 적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함에도 수탁사업의 경우 사전예측이 어렵고 시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수탁사업 비율의 적정성 판단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경영평가 결과 제시된 문제점과 그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4.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및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성과물 발간 외에도 학술지 게재 및 학회발표, 각종 기고문, 자료집, DB구축,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이러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고,

* 연구원에서는 2007.11.5. 자체 학술지인 “인천연구”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학회지 원고 게재료 지원 및 우수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음

또한,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시정반영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시 의회부서의 협조 미흡도 커다란 장애 요인임), 정책 활용도 조사 대상도 심의 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우수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연구 성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연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와 부합되는 과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과제수요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과제 과다수탁으로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귀 원과 수탁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위원에게 수탁과제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되, 연구수행 능력에 따른 적정과제 수에 대한

기준과 수탁과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심의·평가를 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외 전문가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재무회계 규정 및 보수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물품제조·구매)

(단위:건/천원)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건수	29	12	11	6	
금액	344,295	176,448	93,732	74,115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해복구 등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 가격 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전기공사 등의 경우 8천만원,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로 구분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자 중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1995. 10. 19 재무회계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약의 계약분야의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명 경쟁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체 규정에 일반경쟁 입찰방법 및 절차,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 또는 절차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계약방법,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등의 경우 2인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의견적 안내공고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및 각종 출연·출자기관은 인건비성 경비내 임금(제수당 포함) 및 복리후생비 등은 각 법인별로 자체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지급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을 지급하면서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으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등 회계관련 업무를 부적정 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재무회계규정의 계약분야 중 각종 계약의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 행정

안전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투명한 재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며,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자체보수규정 등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초빙연구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08년 인천발전연구원 인력운영 현황

(2008. 10 현재)

구 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기능직	초빙연구원	비고
92	1	34	12	1	44	

[위법부당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직렬은 연구직, 관리직, 기능직,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직급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으로 구분하고, 관리직은 일반행정·정보관리 및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직급은 행정·전산·사서직의 1급 ~ 3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이라 함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임시직이라 함은 단순한 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연구원의 조직은 연구실, 행정실 및 한시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연구직, 관리직, 정보관리직, 기능직,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직급 및 정원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08년도 각종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경영연구실(10명), 도시계획·교통연구실(22명), 도시환경연구실(4명), 동북아·물류연구실(4명), 인천여성센터(2명), 지역혁신협의회(1명), 연구기획실(1명) 등 7개부서 총 44명의 초빙연구원을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에는 연구직의 직렬 및 정원을 정함에 있어 초빙연구원에 대한 자격, 채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빙연구원을 위촉함에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당해 사업주관부서 연구책임자의 추천에 의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등급을 정함에 있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등급표에 의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채용 기간중에 경력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보수등급표를 변경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44명의 초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월 100백만 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인력운영종합계획 등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반영치 않고 운영하고 있는 등 초빙연구원 채용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초빙연구원 위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등에 자격, 채용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인력운영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성과급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성과급 수당 지급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예산액	지급내역	비고
2007	156,681(보수 6%)	전체 5등급 금액차등	
2008		연구·관리 구분 비율차등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항목에는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인천발전연구원 『근무성적평정규칙』에서 직원에 대한 평가는 연구직,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연구직은 연구과제에 대한 양평가 및 질평가,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며 관리직은 업무실적을 기초로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인천발전연구원 『보수규정』 제14조에서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성과의 평가 기준 및 지급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에 업무성과에 따라 조직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별로 차등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성과급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보수규정에서 지급의 근거만을 명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규정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급시마다 지급방안을 달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 : 연구·관리직 구분없이 5등급화하여 50만원씩 차등하여 지급
2008년도 : 연구직 5등급화하여 기준단가에 230%~30%, 관리직 3등급화하여 170%~60%까지 지급

예산편성 또한 보수액의 일정비율을 상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여건에 따라 변동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면 그 평가결과를 성과급 수당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원장의 지급률에만 적용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 보직자(연구기획실장, 행정실장 및 각 연구실장)는 예산편성에 따라 각기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성과급 수당지급시 임용기간별로 월할 계산하여 3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직책수행자인센티브라 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도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어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연봉계약 및 성과급 수당 지급에 가감없이 중복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성과급 수당지급시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더하여 다면평가 등을 통한 별도의 조직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요구되며,

지급대상도 일정비율은 지급 제외자를 두어 업무의 긴장을 유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급제외인원 없이 초빙연구원을 포함하여 연구원 소속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성과급 수당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제정 등 전반적인 지급체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성과급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을 방법을 명문화하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성과급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매년 실시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지급비율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각 보직자에게 인센티브라 하여 성과급 수당을 일률적으로 추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등급 결정 및 대상자 선정의 결정방법도 근무성적결과 외에 경영평가 결과 및 다면평가 결과 등 별도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등 성과급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 성과급 수당 지급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예산액	지급내역	비고
2007	156,681(보수 6%)	전체 5등급 금액차등	
2008		연구·관리 구분 비율차등	

[위법부당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사업수행규정』 제14조에서 원장은 외부로부터 수탁연구외뢰가 있으면 연구수행 가능여부와 수탁연구책임자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제16조에서는 연구의 개요,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연구일정계획, 예산내역, 가타 위탁기관의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7조에서 수탁용역금액의 75%범위(위탁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내에서 편성집행하고, 수탁연구사업수익의 15% 범위 안에서 이를 특별연구장려금으로 편성, 적립하여 집행할 수 있고, 제26조에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전문가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7조에서 위탁연구책임자는 용역을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역의 내용과 필요성, 소요예산, 용역대상자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이 수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더욱이 용역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다음과 같이 수(위)탁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사업수행규정』 제14조에서 수탁연구의 의뢰가 있으면 연구수행 가능여부와 수탁연구책임자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최초 수탁용역심의시의 간사는 용역수행책임자가 아닌 자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수행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최초 용역사업 타당성여부의 심사 때부터 이미 용역수행책임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간사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심의를 실시할 때에도 가·부의 결정을 위원 개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작성된 “운영위원회 수탁용역사업 심의서”에 이미 가·부를 결정한 후 위원 서명을 받고 있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고,

수탁연구수행계획서에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을 구성하게 하고 있고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수행 비용을 충당하고자 한다면, 수탁연구수행계획서에는 연구자별 업무분장 및 책임한계와 초빙연구원의 채용여부 및 그 업무한계, 위탁용역 시행시 그 과업범위 및 전체용역에서의 수행비율 등을 명시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명시를 누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연구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배분비율을 용역책임수행자가 각기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지출계약에 관한 사무는 행정실 고유의 업무수행임도 지원부서라 하여 연구장려금의 일부를 행정실로 지급하여 행정실에서는 이를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용역을 실시할 경우 단순 조사가 아

닌 기술부문의 용역을 위탁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연구원 연구자의 과업비중이 줄어들었다 할 것임에도 특별연구장려금 지급시에 이에 대한 가감없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전체를 지급하고 있고,

위탁용역사업심의시에도 수탁용역사업 심의시와 마찬가지로 가·부의 결정을 위원 개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작성된 “운영위원회 위탁용역사업 심의서”에 이미 가·부를 결정한 후 위원 서명을 받고 있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으며,

계약과정에서도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인력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는 후에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임하여야 할 것임에도 용역책임수행자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없이 단독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임하게 하고 있는 등 수(위)탁용역수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위배되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수(위)탁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사업수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심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수탁연구수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위탁용역수행 포함)별 업무량, 업무비중, 수행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연구장려금 지급시 그 지급비율 및 지급기준을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위탁용역 심의시 평가위원 선발은 인천발전연구원의 분야별 인력POOL을 선정하고 무작위 추첨 등 객관적인 선발방법으로 정당한 의사결정이 있는 후에 위원을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집행내역

(단위:건/천원)

구 분	횟 수	금 액	비고
경조사비	18회	4,300	
회비 및 후원금	34회	1,550	

[위법부당내용]

○ 2006.5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2008.3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축의·부의 금품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결혼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되,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임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축·부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사적인 집행을 금하고 소속직원 또는 직무관련 기관(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기준과 다르게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기관의 공무원이나 단체·언론사 직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감사대상기간 동안 34회에 걸쳐 총 1,55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각종 단체에 회비 및 후원금을 18회에 걸쳐 총 4,3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출연·출자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임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을 감안하시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업소세(종업원할)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 납부대상이 되며, 종업원수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호에서 “「종업원 수 50인 이하」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에서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 급여의 총액에 100분의 0.5를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 3/10,000)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관할 구청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출된 사업소세에 민간출연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세액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우 정규직 47명, 초빙연구원 47명(변동 있음), 시 파견 시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빙연구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천발전연구원 원장과 초빙연구원간에 위촉직급, 위촉계약기간, 참여연구과제명, 피임용자의 보수월액, 피임용자의 근무 형태(상근으로 함), 피임용자의 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초빙연구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초빙연구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초빙연구원에 대하여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세액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금액과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8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1만분의3)”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우 퇴직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연도 말에 일괄 납부할 예정으로 8,144,850원을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금액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남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퇴직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월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